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 대책 마련 절실

법안 강화 불구 작년 광주 3,258·전남 8,816마리
전문가 “관련법 개선·입양전 교육 내실화 등 필요”

정부가 동물 유기법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수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의 동물에 대한 전문성 향상, 관련법을 세분화·체계화하고 입양 전 교육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유기 때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여전히 거리로 버려지고 있다.

지난 2018~2021년 광주시에는 총 1만 3,914마리가 유기됐다고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269마리 2019년 3,830마리 2020년 3,557마리가 버려졌다. 법이 강화된 2021년에는 3,258마리가 유기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도 총 2만 5,219마리가 버려졌다고 접수됐다. 2018년 6,736마리 2019년 8,585마리 2020년 8,809마리가 유기됐다. 법안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8,816마리가 유기돼 전년보다 더 늘었다.

이처럼 연간 3,000~8,000여 마리가 버려지고 있지만,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물 유기와 학대 등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전남 경찰 사건이 접수된 건

수는 광주경찰청이 22건으로 19명을 입건했다. 같은 기간 전남 경찰청은 29건이 접수, 총 28명을 입건했다.

처벌과 신고건수 등이 저조한 이유로는 동물 유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증거 확보도 어려워 법적인 처벌 등으로 이어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는 유기동물 가해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기로 접수되더라도 유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유기로 고발하더라도 증거 수집도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된 강아지는 주인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 유기동물 중 미등록된 동물들도 있어 주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기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입양 전 교육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광주동물협회 위드 관계자는 “법은 강화됐지만 유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대 또는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해마다 반려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도 동물 유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뿐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 충원은 물론 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의 동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동물이 단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대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사건과 유기 등과 관련해 수사 매뉴얼과 전문성이 부족해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북부서, 수사·형사와 직제 개편

상반기 인사 발령부터 반영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와 형사과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분과 개편 대상에 포함돼 직제 개편 준비에 착수했다.

23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형사과 분과 대상에 광주 북부서가 포함돼 직제 개편이 진행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부서를 2개로 분과하는 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전국 경찰서 중 부서별 수사 인력이 55명 이상인 50여 개 경찰관서가 분과 대상이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북부서가 유일하게 수사과 형사과 분과 대상에 포함됐다.

직제가 개편되면 북부서는 기존 수사과가 수사 1과(경제팀), 수사 2과(지능·사이버팀)로 나뉜다.

형사과는 형사 1과(형사팀), 형사 2과(강력·마약·실종팀)로 각각 나뉘어 예정이다.

당초 수사과는 지능·경제과, 형사과는 형사·강력과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담당 사건이 바뀌는 등 사무 조정 이 수시로 이뤄질 것을 고려해 통솔 범위에 따라 담당 사건 분야를 명기한 명칭 대신 1·2과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수사과와 형사과로 각각 있었던 지원팀도 통합돼 수사심사관실 직제에 포함된다.

직제 개편은 이번 상반기 인사 발령부터 반영돼 시행될 전망이다. 북부서는 부서별 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북부서 관계자는 “분과 지침이 하달돼 각 과장 사무실 공간을 신규로 마련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며 “직제 개편이 시행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위 출범

여순·순천사건(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순사건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4명이다. 또 2년 임기의 민간 위촉직 위원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회장 등 9명이다.

전해철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중구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현판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남도 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실무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날부터 1년간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심사를 접수한다.

진상규명 신고의 경우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 이후 2년간 진행되는 진상규명 조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희생자·유족 결정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희생자·유족 여부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서울=강병운 기자

“소규모학교 지원책 마련을” 시민모임 “과밀학급 배제 못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코로나19 위기에 상응하는 소규모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1년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872건으로, 기관 2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연령의 낮은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성인에 비해 낮은 면역력’ 등으로 꼽힌다”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교실 내 밀집도’도 확진 가능성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과대학교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초등학교 67명, 중학교 54명으로 소규모학교 (15명)보다 9배 이상 많았다.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
설날을 앞두고 당일 교통혼잡을 피해 23일 오후 광주 시립공원묘지를 찾은 시민들이 미리 성묘하며 조상들의 음역을 기리고 있다.

시민모임은 “서울과 경북, 전북 등은 각각 소규모학교 분산과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미래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일부 소규모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하는 등 학생수만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통폐합 방식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수급, 학급 조정 등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승현 기자

나주신협 선거 앞두고 명단 유출 의혹...경찰수사

나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나주신협 조합원 수천명의 명단이 불법 유출됐다는 고발장이 지난해 말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이사장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누군가 수개월 전부터 부당하게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신협

의 전체 조합원 수는 2만6,000여명이다.

신협중앙회에도 조합원 명단 유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규명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나주=조충권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table><tr><td>광주</td><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tr><tr><td>전남</td><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tr><tr><td>시외</td><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tr></table> 010-6670-9800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충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빚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